감정평가 관계 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간시설 - 연구시설 ② 방재시설 - 유수지 ③ 유통·공급시설 - 시장

④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⑤ 교통시설 - 주차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①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③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④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 면적이 (ㄱ)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 부피 (ㄴ)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① ㄱ: 30, ㄴ: 3　② ㄱ: 30, ㄴ: 5　③ ㄱ: 30, ㄴ: 7
④ ㄱ: 50, ㄴ: 3　⑤ ㄱ: 50, ㄴ: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ㄴ.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ㄱ)결정의 고시일부터 (ㄴ)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ㄴ)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ㄱ)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① ㄱ: 도시·군기본계획, ㄴ: 3년

② ㄱ: 도시·군기본계획, ㄴ: 5년

③ ㄱ: 도시·군관리계획, ㄴ: 1년

④ ㄱ: 도시·군관리계획, ㄴ: 3년

⑤ ㄱ: 도시·군관리계획, ㄴ: 5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제1종일반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④ 준공업지역

⑤ 준주거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⑤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②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④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④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⑤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ㄹ.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주택의 지번
ㄴ.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ㄷ.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ㄹ. 용도지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②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2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③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27. 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장 ② 광역시장 ③ 특별자치도지사
④ 시장 ⑤ 군수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②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③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② 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⑤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ㅇ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ㄱ)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ㅇ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0일, ㄴ: 2분의 1　② ㄱ: 30일, ㄴ: 3분의 2　③ ㄱ: 60일, ㄴ: 2분의 1

④ ㄱ: 60일, ㄴ: 3분의 2　⑤ ㄱ: 90일, ㄴ: 3분의 2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②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3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⑤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②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⑤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5.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②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6.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⑤ 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① 도시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도시재생사업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ㄱ. 광장	**ㄴ. 구거(溝渠)**	**ㄷ. 놀이터**
ㄹ. 녹지	**ㅁ. 공동구**	**ㅂ. 마을회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ㅂ ④ ㄹ, ㅁ ⑤ ㅁ, ㅂ

회계학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검증가능성이다.

②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고기간이 지난 정보는 더 이상 적시성을 갖지 않는다.

④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

⑤ 표현충실성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분상품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ㄱ. 부채상환을 위해 12개월 이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
ㄴ. 사용을 위해 구입한 수입인지와 우표
ㄷ.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2년인 회사채
ㄹ.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처분할 예정인 상장기업의 보통주
ㅁ.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43.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②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③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④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44. (주)감평은 20×1년 중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80,000을 최초 인식하였다. 20×1년 말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65,000으로 하락하였다. 공정가치 변동 중 ₩5,000은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해당 금융부채로 인해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는 않는다.)

① ₩10,000 감소 ② ₩5,000 감소 ③ 영향없음

④ ₩5,000 증가 ⑤ ₩10,000 증가

45.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산은?

○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
○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수 없다.
○ 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이다.

① 특허권 ② 회원권 ③ 영업권 ④ 라이선스 ⑤ 가상화폐

46. (주)감평은 20×1년 초 해지불능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자산(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과 리스부채(리스기간 5년, 매년 말 정기리스료 ₩13,870,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 무상이전 약정)를 각각 ₩50,000씩 인식하였다. 리스계약의 내재이자율은 연 12%이고 (주)감평은 리스회사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말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는 ₩35,000이다. 동 리스계약이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리스계약은 소액자산리스 및 단기리스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① ₩5,000 감소 ② ₩6,000 감소 ③ ₩15,000 감소
④ ₩16,000 감소 ⑤ ₩21,000 감소

47. (주)감평의 20×1년 중 발생한 자본항목 사건이다.

○ 무상증자 시행	₩500	○ 주식배당 결의	₩300
○ 자기주식 취득	600	○ 자기주식 소각	600
○ 당기순이익 발생	1,000	○ 기타포괄이익 발생	800

20×1년 초 (주)감평의 자본은 ₩10,000이고 이 외에 자본항목 사건은 없다고 가정할 때, 20×1년 말 (주)감평의 자본은?

① ₩10,400 ② ₩11,000 ③ ₩11,200 ④ ₩11,600 ⑤ ₩11,800

48. (주)감평은 20×1년부터 제품판매 ₩5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제품판매 대가로 ₩10,000을 수취하였다. 포인트는 20×2년부터 (주)감평의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이행약속은 (주)감평의 중요한 수행의무이다. (주)감평은 포인트 1점당 ₩0.7으로 측정하고, 20×1년 부여된 포인트 중 75%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였다. 포인트가 없을 때 20×1년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9,450이다.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주)감평이 판매대가 ₩10,000을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포인트 관련 이연수익(부채)은?

① ₩1,000 ② ₩1,050 ③ ₩1,450 ④ ₩1,550 ⑤ ₩2,000

49. (주)감평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인 전환상환우선주(액면배당율 연 2%, 매년 말 배당지급)를 액면발행 하였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시 조달한 현금 중 금융부채요소의 현재가치는 ₩80,000이고 나머지는 자본요소(전환권)이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시점의 금융부채요소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20×2년 초 전환상환우선주의 40%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주)감평의 자본증가액은?

① ₩32,000 ② ₩34,400 ③ ₩40,000 ④ ₩42,400 ⑤ ₩50,000

50. (주)감평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창고가 작아 기말 현재 외부에 보관중인 (주)감평의 원재료
ㄴ. (주)감평이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품
ㄷ. (주)감평이 고객에게 인도하고 기말 현재 고객이 사용의사를 표시한 시용품
ㄹ. (주)감평이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품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ㄹ ⑤ ㄷ, ㄹ

5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하며, 거래가격에는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②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변동대가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에는 기댓값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④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⑤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52.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②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③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⑤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3.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②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③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④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 표시한다.

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4. (주)감평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 정액법 상각)를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20×4년 초 (주)감평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잔존가치도 변경하였다. (주)감평이 20×4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100,000인 경우, 기계장치의 변경된 잔존가치는?

① ₩20,000 ② ₩30,000 ③ ₩50,000 ④ ₩70,000 ⑤ ₩130,000

55. (주)감평의 20×1년도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1년도 상품 매입원가는? (단, (주)감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에 속하는 매입세액이다.)

항목	금액	비고
당기매입	₩110,000	부가가치세 ₩10,000 포함
매입운임	10,000	
하역료	5,000	
매입할인	5,000	
리베이트	2,000	
보관료	3,000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
관세납부금	500	

① ₩108,500 ② ₩110,300 ③ ₩110,500 ④ ₩113,500 ⑤ ₩123,500

56. (주)감평은 20×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구입과 동시에 무이자부 약속어음(액면금액 ₩300,000, 3년 만기, 매년 말 ₩100,000 균등상환)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거래 당시 (주)감평이 발행한 어음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당해 차입원가는 자본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년 (주)감평이 인식할 비용은? (단, 12%, 3기간의 연금현가계수는 2.40183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59,817 ② ₩80,061 ③ ₩88,639 ④ ₩108,883 ⑤ ₩128,822

57. (주)감평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8,400주이다. (주)감평은 20×1년 7월 초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유상증자 권리행사 전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50,000이고, 유상증자 시의 주당 발행금액은 ₩40,000, 발행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감평은 20×1년 9월 초 자기주식을 1,500주 취득하였다. (주)감평의 20×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① 18,667주 ② 19,084주 ③ 19,268주 ④ 19,400주 ⑤ 20,400주

58. (주)감평이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할 충당부채는? (단, 아래에서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사건	비고
20×1년 9월 25일에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예상비용은 ₩300,000으로 추정된다.	20×1년 말까지는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0×1년 말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동 소송에서 패소 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주)감평의 자문 법무법인에 의하면 손해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이 ₩450,000으로 추정된다.	
회사가 사용 중인 공장 구축물 철거 시, 구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는 원상복구의무가 있다. 원상복구원가는 ₩200,000으로 추정되며 그 현재가치는 ₩120,000이다.	
판매한 제품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어 보증비용 ₩350,000이 예상되며, 그 지출가능성이 높다. 동 보증은 확신유형 보증에 해당한다.	예상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50 % 만큼 변제받기로 하였다.

① ₩295,000 ② ₩470,000 ③ ₩550,000 ④ ₩670,000 ⑤ ₩920,000

59. 20×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1년도 유효법인세율은? (단,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ㅇ 20×1년 세무조정 사항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ㅇ 20×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ㅇ 연도별 법인세율은 20 %로 일정하다.

① 19.27 % ② 20 % ③ 21.4 % ④ 22 % ⑤ 22.8 %

60. (주)감평은 20×1년 중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지출시기	구분	금액	비고
1월 초 ~ 6월 말	연구단계	₩50,000	
7월 초 ~ 9월 말	개발단계	100,000	자산인식 요건 미충족함
10월 초 ~ 12월 말	개발단계	50,000	자산인식 요건 충족함

(주)감평은 20×2년 말까지 ₩100,000을 추가 지출하고 개발을 완료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는 20×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3년 말 현재 개발비가 손상징후를 보였으며 회수가능액은 ₩80,000이다. 20×3년 인식할 개발비 손상차손은?

① ₩50,000 ② ₩50,500 ③ ₩53,750 ④ ₩55,000 ⑤ ₩70,000

61.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②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③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④ 계약에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는 않는다.

⑤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62. 다음 항목과 계정 분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재고자산

② 소유 자가사용부동산 - 유형자산

③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④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재고자산

⑤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투자부동산

63. 공기청정기를 위탁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은 20×1년 초 공기청정기 10대(대당 판매가격 ₩1,000, 대당 원가 ₩700)를 (주)한국에 적송하였으며, 운송업체에 총운송비용 ₩1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위탁받은 공기청정기 10대 중 7대를 20×1년에 판매하였다. 20×1년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는?

① ₩4,970 ② ₩5,700 ③ ₩7,070 ④ ₩8,100 ⑤ ₩10,100

64. (주)감평은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각각 20개씩 부여하고 2년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감평은 20×1년에 ₩6,000, 20×2년에 ₩6,500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다. 20×1년 초부터 20×2년 말까지 30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였으며, 20×3년 말 종업원 10명이 권리를 행사하였다. 20×3년 말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5, 개당 내재가치는 ₩10이라고 할 때, (주)감평이 20×3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① ₩5,500 ② ₩6,000 ③ ₩7,000 ④ ₩7,500 ⑤ ₩8,500

65. (주)감평은 20×1년 초 주당 액면금액이 ₩150인 (주)한국의 보통주 20주를 주당 ₩180에 취득하였고, 총거래원가 ₩150을 지급하였다. (주)감평은 동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 20×1년 말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240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20×1년 인식할 기타포괄이익은?

① ₩1,050 ② ₩1,200 ③ ₩1,350 ④ ₩1,600 ⑤ ₩1,950

66. (주)감평의 20×2년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1,500과 ₩600이며, 관련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20×1년 말	20×2년 말
재고자산	₩1,500	₩1,300
미수수익	500	800
매출채권	500	400
미지급비용	600	300

20×2년 순현금흐름(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① (-)₩800 ② (-)₩700 ③ (+)₩300 ④ (+)₩400 ⑤ (+)₩600

67. (주)감평은 재고자산을 20×1년 말까지 평균법을 적용해 오다가 20×2년 초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다. 다음은 20×1년 말과 20×2년 말의 평가방법별 재고자산 금액이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재고자산 금액	평균법	₩2,800	₩2,200
	선입선출법	2,500	2,800

평균법을 적용한 20×2년 당기순이익이 ₩2,000일 때, 변경 후 20×2년 당기순이익은? (단, 동 회계정책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선입선출법으로의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① ₩1,400 ② ₩2,000 ③ ₩2,300 ④ ₩2,600 ⑤ ₩2,900

68. (주)감평은 취득원가 ₩2,500(처분당시 장부금액은 ₩1,500, 원가모형 적용)인 기계장치를 20×1년 초 ₩1,600에 처분하였다. (주)감평은 기계장치 장부금액을 제거하지 않고 처분대가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20×1년과 20×2년 각각 취득원가의 1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20×3년 초 발견되었고, 20×2년도의 장부가 마감되었다면, (주)감평의 2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상기 오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① 영향없음 ② ₩100 증가 ③ ₩250 증가 ④ ₩500 증가 ⑤ ₩600 증가

69. (주)감평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20×1년 말 장부금액은 ₩3,500(취득원가 ₩6,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 원가모형 적용)이다. 20×1년 말 동 기계장치의 진부화로 가치가 감소하여 순공정가치는 ₩1,200, 사용가치는 ₩1,8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기계장치 손상차손은?

① ₩1,200 ② ₩1,700 ③ ₩1,800 ④ ₩2,000 ⑤ ₩2,300

70. (주)감평은 20×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하여 2년간 제품보증 조건으로 건조기(대당 판매가격 ₩100)를 판매하고 있다. 20×1년 1,500대, 20×2년 4,000대의 건조기를 판매하였으며,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에 따라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증비용은 대당 평균 ₩20이 소요된다. 당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연도별 보증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	20×2년
20×1년 판매분	5대	15대
20×2년 판매분		30대

20×2년 말 보증손실충당부채는? (단, 보증요청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충당부채의 현재가치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800 ② ₩1,000 ③ ₩1,200 ④ ₩1,800 ⑤ ₩2,300

71. 원가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약이론을 원가관리에 적용한 재료처리량공헌이익(throughput contribution)은 매출액에서 기본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조이전단계보다는 제조단계에서의 원가절감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③ 목표원가계산은 표준원가와 마찬가지로 제조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④ 균형성과표는 전략의 구체화와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다.

⑤ 품질원가계산에서는 내부실패원가와 외부실패원가를 통제원가라 하며, 예방 및 평가활동을 통해 이를 절감할 수 있다.

72. (주)감평은 단일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원가계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공품	3,000개(완성도 80%)
당기착수수량	14,000개
당기완성품	13,000개
기말재공품	2,500개(완성도 60%)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중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30과 ₩20이다. 완성품에 배부되는 정상공손원가는?

① ₩35,000 ② ₩44,000 ③ ₩55,400 ④ ₩57,200 ⑤ ₩66,000

73. (주)감평은 제품라인 A, B, C부문을 유지하고 있다. 20×1년 각 부문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A부문	B부문	C부문	합계
매출액	₩200,000	₩300,000	₩500,000	₩1,000,000
변동원가	100,000	200,000	220,000	520,000
공헌이익	100,000	100,000	280,000	480,000
고정원가				
급여	30,000	50,000	80,000	160,000
광고선전비	10,000	60,000	70,000	140,000
기타 배부액	20,000	30,000	50,000	100,000
영업손익	₩40,000	(₩40,000)	₩80,000	₩80,000

(주)감평의 경영자는 B부문의 폐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ㅇ 급여는 회피불능원가이다.
- ㅇ 광고선전은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B부문을 폐쇄할 경우 B부문의 광고선전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 ㅇ 기타 배부액 총 ₩100,000은 각 부문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부한 원가이다.
- ㅇ B부문을 폐쇄할 경우 C부문의 매출액이 20% 감소한다.

(주)감평이 B부문을 폐쇄할 경우 (주)감평 전체 이익의 감소액은? (단, 재고자산은 없다.)

① ₩36,000 ② ₩46,000 ③ ₩66,000 ④ ₩86,000 ⑤ ₩96,000

74. (주)감평은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며, 제품 1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20×1년 3월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10,400시간이고,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23,000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2,000(불리)
변동제조간접원가 총차이	1,000(유리)

(주)감평의 20×1년 3월 실제 제품생산량은?

① 4,600개 ② 4,800개 ③ 5,000개 ④ 5,200개 ⑤ 5,400개

75. (주)감평의 생산량 관련범위 내에 해당하는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량	
	2,000개	5,000개
총원가		
변동원가	A( )	?
고정원가	B( )	?
소계	?	E( )
단위당 원가		
변동원가	C( )	?
고정원가	?	₩10
소계	D( )	₩30

① A: ₩40,000 ② B: ₩50,000 ③ C: ₩20 ④ D: ₩45 ⑤ E: ₩90,000

76.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를 기계작업시간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20×1년 실제 기계작업시간은?

제조간접원가(예산)	₩928,000
제조간접원가(실제)	960,000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840,710
기계작업시간(예산)	80,000시간

① 70,059시간 ② 71,125시간 ③ 72,475시간 ④ 73,039시간 ⑤ 74,257시간

77. (주)감평이 20×2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부원가계산보다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30,000 더 많았다. 20×2년 기초재고수량은? (단, 20×1년과 20×2년의 생산·판매활동 자료는 동일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재공품은 없다.)

당기 생산량	5,000개
기초재고수량	?
기말재고수량	500개
판매가격(개당)	₩1,500
변동제조간접원가(개당)	50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750,000

① 580개 ② 620개 ③ 660개 ④ 700개 ⑤ 740개

78. (주)감평의 20×1년 매출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변동원가	₩700,000
공헌이익	500,000
고정원가	300,000
영업이익	₩200,000

20×2년에는 판매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의 20×2년 예상영업이익은? (단, 판매량 이외의 다른 조건은 20×1년과 동일하다.)

① ₩260,000 ② ₩280,000 ③ ₩300,000 ④ ₩340,000 ⑤ ₩380,000

79. (주)감평은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20×1년 (주)감평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00,000과 ₩3,000,000이며, 고정원가는 ₩2,250,000이다. 제품A와 제품B의 매출배합비율이 각각 25%와 75%이며, 제품A의 공헌이익률은 23%이다. 제품B의 공헌이익률은?

① 29.25% ② 34.4% ③ 35% ④ 37.4% ⑤ 39%

80. (주)감평은 평균영업용자산과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투자수익률(ROI)과 잔여이익(RI)을 산출하고 있다. (주)감평의 20×1년 평균영업용자산은 ₩2,500,000이며, ROI는 10%이다. (주)감평의 20×1년 RI가 ₩25,000이라면 최저필수수익률은?

① 8% ② 9% ③ 10% ④ 11% ⑤ 12%

감정평가사

2021년 1차 2교시 정답과 해설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④	①	⑤	④	①	⑤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③	③	⑤	⑤	③	⑤	④	④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③	①	①	③	②	②	①	②	④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④	③	②	②	⑤	④	⑤	⑤	④	③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②	⑤	③	⑤	③	⑤	③	①	②	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③	④	④	②	①	④	②	②	③	④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④	①	①	④	①	⑤	⑤	①	②	⑤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④	②	⑤	②	⑤	③	④	③	⑤	②

시험지·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 해설 봄기출

1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 시설 **정답 ①**

① X 해설 연구시설은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함께 공공 · 문화체육시설로 묶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② O 해설 방재시설에는 하천 · 유수지 · 저수지와 방화 · 방풍 · 방수 · 사방 · 방조설비가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1 해설 계속 **정답 ①**

③ O 해설 시장은 공동구 · 유통업무설비 · 수도 · 가스공급설비 등과 함께 유통 · 공급시설로 묶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④ O 해설 도축장은 장사시설 · 종합의료시설과 함께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⑤ O 해설 교통시설에는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과 함께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가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정답 ②

① X 해설 시 ·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수립하고, 협의를 거친 요청으로 단독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제3항).

② O 해설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지정 후 3년 안에 시 · 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③ X 해설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친 광역계획권은 관할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④ X 해설 같은 도 안의 광역계획권은 관할 시장 ·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⑤ X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장관 단독 수립 사유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3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도시·군기본계획 정답 ④

① X 해설 도시 · 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가 수립한다 —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② X 해설 시장 · 군수가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③ X 해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타당하면 도시 · 군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④ O 해설 입안일부터 5년 안에 토지적성평가를 했다면 기초조사에서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 가목).

⑤ X 해설 도지사가 시 · 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4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정답 ①

① O 해설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는 30만제곱미터 미만 형질변경과 3만~50만세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를 심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개정] 지금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이다.

② X 해설 그날 기준으로 토석채취 심의의 아래 한도는 3만세제곱미터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나목) [개정] 지금은 5만세제곱미터라 이 조합이 맞다.

③ X 해설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부터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나목).

④ X 해설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 형질변경은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심의한다 — 50만 기준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2호).

⑤ X 해설 두 칸 모두 어긋난다 — 형질변경은 30만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는 3만세제곱미터 이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5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정답 ⑤

① O 해설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제1종) · 중층(제2종) · 중고층(제3종) 주택 중심으로 나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나목).

② O 해설 복합용도지구는 시 ·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일반주거 · 일반공업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31조 제6항).

③ O 해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 시가지경관 ·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④ O 해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관리지역에서 지정 · 고시되면 따로 결정하지 않아도 농림지역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⑤ X 해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6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실효 정답 ④

① X 해설 매수하지 않기로 한 토지에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ㄹ도 옳은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제1호).

② X 해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사야 하므로 ㄷ이 틀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항).

③ X 해설 ㄷ은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상환기간 10년 이내(ㄱ)와 시행자인 시장 · 군수(ㄴ)가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 제6항).

④ O 해설 시설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가 매수의무자이며, 매수 거부 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제3항 · 제7항).

⑤ X 해설 ㄷ(3년)이 틀렸고, 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10년 이내(ㄱ)가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7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공동구 정답 ①

① X 해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공동구 설치 의무 지역에 없다 —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 · 정비구역 등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② O 해설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은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③ O 해설 경제자유구역도 법률이 직접 열거한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

④ O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도 규모를 넘으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호).

⑤ O 해설 도청이전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대통령령이 더한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8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정답 ⑤

① X 해설 실효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이고, 착수 기한은 5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8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기간 5년은 맞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3조 제2항).

③ X 해설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 1년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④ X 해설 3년은 구역 지정 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을 때 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기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⑤ O 해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은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9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정답 ②

① X 해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한도는 60퍼센트로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

② O 해설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한도는 80퍼센트로 보기 가운데 가장 크다 — 중심상업지역(90퍼센트) 다음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호).

③ X 해설 계획관리지역은 40퍼센트로 관리지역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보기 중에서는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9호).

④ X 해설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로 전용공업 · 일반공업지역과 같고 일반상업지역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3호).

⑤ X 해설 준주거지역은 70퍼센트로 근린상업지역과 같고 일반상업지역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6호).

10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정답 ①

① X 해설 시설을 공중 · 지하에 설치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자에 대한 보상은 조례가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O 해설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 때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10 해설 계속 **정답 ①**

③ O 해설 시 ·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 지정목적과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④ O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반드시 두고,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⑤ O 해설 공동구 점용료 · 사용료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3항).

11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 · 청문 · 토지에의 출입 **정답 ③**

① X 해설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호).

② X 해설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을 수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호).

③ O 해설 지가 동향 · 토지거래 상황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제2호, 제130조 제1항 제3호).

④ X 해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⑤ X 해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 · 경감하게 하려고 거짓 자료를 내면 3년 이하 징역 등 형벌을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2).

12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정답 ②**

① O 해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 산업 · 유통형 · 관광 · 휴양형 · 복합형으로 목적을 나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0호).

② X 해설 사업 완료 후 10년 지난 택지개발지구 등은 용도지역 · 건폐율 등을 유지하되,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그 원칙에서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9호).

12 해설 계속 **정답 ②**

③ O 해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문화재 ·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호의3).

④ O 해설 건폐율 ·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함께 담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도 수립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7호).

⑤ O 해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정 목적과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게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호).

13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 · 결정과 효력 **정답 ③**

① X 해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ㄴ)도 도시 · 군관리계획인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② X 해설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 계획(ㄹ)은 도시 · 군관리계획이 아니고, 정비사업(ㄱ) · 기반시설 개량(ㄷ)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③ O 해설 정비사업,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반시설 개량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 · 군관리계획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 다목 · 라목).

④ X 해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ㄱ)이 빠지고 시범도시사업 재원조달(ㄹ)이 들어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

⑤ X 해설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 계획(ㄹ)은 도시 · 군관리계획의 종류에 들어 있지 않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14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공시법 · 개별공시지가 **정답 ③**

① O 해설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는 대통령령이 정한 명백한 오류라 지체 없이 정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② O 해설 표준지로 선정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는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4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X 해설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고, 말로 하는 신청은 받지 않아 서면으로만 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④ O 해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몫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에 든 비용의 50퍼센트까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⑤ O 해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1제곱미터의 가격으로 결정 ·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15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공시법 · 표준지공시지가 정답 ⑤

① O 해설 표준지는 일단의 토지 가운데 그 일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로 선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② O 해설 표준지 가격을 조사 · 평가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③ O 해설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넘거나 부적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쳐 다시 내게 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

④ O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은 보고서 작성 전에 관할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이들은 20일 안에 의견을 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 제3항).

⑤ X 해설 표준지공시지가는 제출된 보고서의 조사 ·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16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공시법 ·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정답 ⑤

① X 해설 대지면적 · 형상(ㄷ)은 법률이, 용도지역(ㄹ)은 대통령령이 정한 공시사항인데 빠졌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2호).

② X 해설 지번(ㄱ)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ㄴ)도 공시사항인데 빠졌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 제4호).

③ X 해설 용도지역(ㄹ)은 지목 · 도로 상황과 함께 대통령령이 더한 공시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호).

16 해설 계속 정답 ⑤

④ X 해설 용도 · 연면적 · 구조와 함께 적는 사용승인일에는 임시사용승인일(ㄴ)도 포함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호).

⑤ O 해설 지번, 대지면적 · 형상, 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 사용승인일, 용도지역 모두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17 감정평가관계법규 · 감정평가법 · 업무와 자격·시험·등록 정답 ③

① O 해설 결격사유는 등록 신청 때는 거부 사유, 등록 뒤에 생기면 취소 사유가 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② O 해설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갱신하고, 등록일부터 5년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신청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제2항).

③ X 해설 징계로 자격이 취소된 뒤 5년이 안 된 사람은 결격사유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재량이 아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7호).

④ O 해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위해 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⑤ O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아 취소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다시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호, 제13조 제1항).

18 감정평가관계법규 · 감정평가법 · 권리와 의무 정답 ⑤

① O 해설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개정] 지금은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다.

② O 해설 감정평가사는 자격증 · 등록증을 남에게 양도 · 대여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③ O 해설 합동사무소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하고 규약을 붙여 신고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18 해설 계속 정답 ⑤

④ O 해설 감정평가사는 한 번에 한 법인이나 한 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⑤ X 해설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19 감정평가관계법규 ·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법인 정답 ④

① O 해설 토지등의 이용 · 개발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제공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들어간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호).

② O 해설 평가 대상을 직접 사고팔면 공정성을 잃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③ O 해설 합병을 포함해 해산 사유가 생기면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0조 제2항).

④ X 해설 업무정지 중 업무를 한 경우는 인원 미달 미보충과 함께 반드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⑤ O 해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미달하면 6개월 안에 증여나 증자로 메워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제2항).

20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정답 ④

① O 해설 국유재산책임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되, 소속 관서의 특정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7조의2 제3항).

② O 해설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에는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에 따른 사권 설정이 허용된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1호).

③ O 해설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 ·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은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기부를 받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④ X 해설 국가 외의 자도 기부를 조건으로 하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20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O 해설 국유재산 관리 · 처분 관련 법령을 제정 · 개정 · 폐지하려면 총괄청과 감사원 모두와 협의한다(국유재산법 제19조).

21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정답 ③

① O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쓰려고 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2호).

② O 해설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쓰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2항).

③ X 해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의견제출이 아니라 청문을 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37조).

④ O 해설 행정재산으로 쓰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으면 지체 없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⑤ O 해설 행정재산은 오래 점유해도 민법 제245조의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22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정답 ③

① X 해설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한다 — 장애가 없는 범위 기준은 공용 · 공공용 · 기업용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② X 해설 주거용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수의의 방법으로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③ O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으로 써야 하면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 손실은 쓸 기관이 보상한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 · 제3항).

④ X 해설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면 기간은 5년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 가액에 이를 때까지다(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⑤ X 해설 사용허가에는 이 법 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민법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23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유재산법 · 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정답 ①

① O 해설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할 때 정부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 자본 확충 · 경영구조 개편 때도 같다(국유재산법 제60조 제1호).

② X 해설 쓰지 않은 지 5년 이상 된 일반재산이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한 재산은 민간 공동개발 대상이다(국유재산법 제59조의2 제1항).

③ X 해설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일반재산은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 제2호).

④ X 해설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쓰려고 할 때는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 동산도 교환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54조 제1항 제1호).

⑤ X 해설 매각재산의 소유권은 대금을 다 낸 뒤에 이전하고, 분납 중 공익사업상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다(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제2항).

24 감정평가관계법규 · 건축법 ·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정답 ①

① X 해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② O 해설 거주 · 집무 · 작업 · 집회 · 오락 같은 목적으로 머무르며 쓰는 방이 거실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③ O 해설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고층건축물이다 — 초고층은 50층 · 200미터 기준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④ O 해설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로 본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⑤ O 해설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은 채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건축행위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25 감정평가관계법규 · 건축법 · 위반건축물 조치와 이행강제금 등 보칙 정답 ③

① X 해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② X 해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건축법 제80조 제7항).

25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3항).

④ X 해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만 즉시 멈추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⑤ X 해설 반복 부과는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이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26 감정평가관계법규 ·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정답 ②

① X 해설 21층 이상 건축물을 특별시 · 광역시에 지으려면 특별시장 ·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② O 해설 주변 주거 · 교육환경을 지키려고 도지사가 정한 구역 안의 위락시설은 층수와 관계없이 도지사 승인 대상이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3호).

③ X 해설 용도 · 규모가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숙박시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

④ X 해설 허가 뒤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늘린다(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⑤ X 해설 건축허가는 대지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고, 사용권원으로 대신하는 예외에서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빠진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27 감정평가관계법규 · 건축법 · 건축신고·가설건축물과 사용승인 정답 ②

① O 해설 도시 · 군계획시설과 그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건축법 제20조 제1항).

② X 해설 광역시장은 가설건축물 허가권자 목록에 없다 — 광역시 안에서는 관할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한다(건축법 제20조 제1항).

③ O 해설 특별자치도지사도 특별자치시장과 함께 가설건축물 허가권자로 열거되어 있다(건축법 제20조 제1항).

④ O 해설 도에 속한 시에서는 시장이 도시 · 군계획시설 안 가설건축물을 허가한다(건축법 제20조 제1항).

27 해설 계속 정답 ②

⑤ O 해설 군 지역에서는 군수가 허가한다 — 일반 건축허가권자와 같은 체계다(건축법 제2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28 감정평가관계법규 · 공간정보관리법 · 용어의 정의 정답 ①

① X 해설 일반측량은 기본측량 · 공공측량 · 지적측량을 뺀 나머지 측량이다 — 공공 ·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② O 해설 연속지적도는 측량 없이 전산 지적도 · 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이어 만든 도면이라 측량에 쓸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2).

③ O 해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호).

④ O 해설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에서는 시장이 아니라 그 구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⑤ O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려고 하는 지적측량이 지적확정측량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

29 감정평가관계법규 ·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정답 ②

① O 해설 목장용지 안이라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垈)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호).

② X 해설 유원지는 유지(溜池)와 겹치지 않도록 둘째 글자인 「원」으로 표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③ O 해설 물을 늘 쓰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기르는 토지는 답이 아니라 전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호).

④ O 해설 한 필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을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⑤ O 해설 일시적 · 임시적인 용도로 쓰는 동안에는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30 감정평가관계법규 ·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신청 정답 ④

① X 해설 지목변경 신청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이고 축척변경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3항).

② X 해설 축척변경 동의율은 맞지만 지목변경은 60일 안에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③ X 해설 지목변경 기간은 맞지만 축척변경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④ O 해설 지목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고, 축척변경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3항).

⑤ X 해설 지목변경 신청기간은 신규등록 · 등록전환과 같은 60일이다 — 90일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7조, 제78조).

31 감정평가관계법규 · 공간정보관리법 · 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과 지적정리 정답 ④

① O 해설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

② O 해설 지적공부를 작성하거나 다시 작성할 때 잘못 정리된 것도 직권정정 대상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③ O 해설 등록사항을 잘못 입력한 오류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7호).

④ X 해설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일 뿐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

⑤ O 해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공부를 정리했다면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

32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등기법 · 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정답 ③

① X 해설 법인 합병은 상속처럼 포괄승계라 상대방 없이 등기권리자 혼자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② X 해설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③ O 해설 토지가 분할 · 합병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때부터 1개월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④ X 해설 직권 표시변경등기를 한 뒤 지적소관청과 소유명의인에게 알리는 것은 등기관의 일이다(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2항).

⑤ X 해설 토지 멸실등기도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

33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등기법 ·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와 부기등기 정답 ②

① O 해설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제기관 ·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1호).

② X 해설 권리의 변경 · 경정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③ O 해설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뒤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④ O 해설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낸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드시 적고, 환매기간은 정해진 때만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⑤ O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이면 등기필정보를 작성 · 통지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2호).

34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등기법 · 신탁등기와 가등기·가처분 정답 ②

① X 해설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ㄷ은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4항).

34 해설 계속 정답 ②

② O 해설 수탁자가 여럿이면 합유 뜻을 기록하고(ㄱ),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촉탁한다(ㄹ)(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호).

③ X 해설 위탁자가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신청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ㄴ), 대위 말소신청도 할 수 있다(ㄷ)(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④ X 해설 수익자 · 위탁자가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하면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 ㄴ이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⑤ X 해설 합유 기록(ㄱ)이 빠지고 틀린 ㄴ과 ㄷ이 들어갔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35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등기법 · 신탁등기와 가등기·가처분 정답 ⑤

① O 해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을 때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1항).

② O 해설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 혼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③ O 해설 가처분명령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2항 · 제3항).

④ O 해설 본등기의 순위는 본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⑤ X 해설 가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말소하려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명의인 본인만 승낙 없이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36 감정평가관계법규 · 동산채권담보법 · 담보등기 정답 ④

① X 해설 판결에 의한 담보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② X 해설 담보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③ X 해설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

36 해설 계속 정답 ④

④ O 해설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등기관은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⑤ X 해설 담보권 존속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37 감정평가관계법규 ·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정답 ⑤

① X 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3호).

② X 해설 재난방지 계획을 바꾸는 것도 경미한 변경이라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4호).

③ X 해설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5호).

④ X 해설 건축물 최고 높이를 바꾸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서면통보 · 설명회 · 공람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호).

⑤ O 해설 용적률 확대는 10퍼센트 미만일 때만 경미한 변경이라, 20퍼센트 미만 확대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7호).

38 감정평가관계법규 ·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답 ⑤

① O 해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1항).

② O 해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대로 운영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경비를 그 규정에 따라 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2항).

③ O 해설 추진위원회는 회계장부와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안에 조합에 넘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4항).

④ O 해설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는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0항).

38 해설 계속 정답 ⑤

⑤ X 해설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등을 해제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39 감정평가관계법규 · 도시정비법 · 용어의 정의와 정비사업의 종류 정답 ④

① X 해설 이 법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셋이고, 도시재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은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② X 해설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의 사업이라 저소득 밀집지역 개선과 다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③ X 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④ O 해설 저소득 주민 밀집 · 기반시설 열악 지역이나 단독 · 다세대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 보전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⑤ X 해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으로 정비사업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40 감정평가관계법규 · 도시정비법 · 용어의 정의와 정비사업의 종류 정답 ③

① X 해설 광장(ㄱ)은 대통령령이, 구거(ㄴ)는 법률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제4호).

② X 해설 구거(ㄴ)는 정비기반시설이고, 놀이터(ㄷ)만 공동이용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 제5호).

③ O 해설 놀이터 · 마을회관은 주민이 함께 쓰는 공동이용시설이라,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이 아니면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9호).

④ X 해설 녹지(ㄹ)는 대통령령이, 공동구(ㅁ)는 법률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제1호).

40 해설 계속 정답 ③

⑤ X 해설 공동구(ㅁ)는 도로 · 상하수도 · 공원과 함께 정비기반시설이고, 마을회관(ㅂ)만 공동이용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 제5호).

41 회계학 · 재무회계 · 개념체계 — 재무보고의 목적과 질적특성 정답 ②

① X 해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 두 가지다 — 검증가능성은 비교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과 함께 보강적 질적특성이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② O 해설 정보에 예측가치나 확인가치가 있으면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다 — 일부 이용자가 그 정보를 실제로 쓰지 않아도 마찬가지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③ X 해설 보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세를 살피거나 평가하는 이용자에게는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④ X 해설 비교가능성은 닮은 항목은 닮아 보이게, 다른 항목은 달라 보이게 하는 것이다 — 지문은 두 짝을 거꾸로 적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⑤ X 해설 표현충실성의 오류 없음은 서술이나 절차에 잘못과 누락이 없다는 뜻일 뿐, 추정치까지 정확히 맞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2 회계학 · 재무회계 ·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수취채권 정답 ⑤

① X 해설 ㄷ(만기 2년 회사채)과 ㅁ(자기지분상품)이 빠졌다 — 현금성자산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안에 오는 채무상품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② X 해설 ㄴ(수입인지·우표)과 ㅁ이 빠졌다 — 쓰려고 산 우표·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라 소모품이나 선급비용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③ X 해설 ㄱ과 ㄹ이 빠졌다 — 12개월 넘게 묶인 예금은 바로 쓸 수 없고, 보통주 같은 지분상품은 만기가 없어 현금성자산이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④ X 해설 ㄹ이 빠졌다 — 곧 팔 계획이고 현금으로 바꾸기 쉬워도 보통주는 가격변동 위험이 커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⑤ O 해설 사용이 묶인 예금(ㄱ)·우표(ㄴ)·만기 3개월 초과 채권(ㄷ)·보통주(ㄹ)는 현금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자기주식(ㅁ)은 자본에서 뺀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43 회계학 · 재무회계 · 개념체계 —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측정(공정가치)과 자본유지 정답 ③

① O 해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끼리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자산을 팔고 받거나 부채를 넘기며 낼 가격, 곧 유출가격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② O 해설 공정가치는 그 기업이 자산을 어떻게 쓸지가 아니라 시장참여자가 매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③ X 해설 시장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되도록 많이 쓰고, 회사 자체 추정처럼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되도록 적게 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④ O 해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게 행동한다고 보고, 그들이 가격을 매길 때 쓸 가정으로 측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⑤ O 해설 비금융자산은 최고·최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잰다 — 직접 그렇게 쓰거나 그렇게 쓸 참여자에게 팔아 효익을 얻는 능력을 본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44 회계학 · 재무회계 · 금융부채의 분류와 사채의 발행 정답 ⑤

① X 해설 부채의 공정가치가 줄면 갚을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 이익이다 — 손실로 보면 방향이 거꾸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② X 해설 신용위험 변동분 5,00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내 당기손익에 넣지 않는다 — 더구나 부채 감소는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③ X 해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부채는 신용위험 변동분만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내고,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넣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④ X 해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거꾸로 나눈 금액이다 — 신용위험분 5,000이 기타포괄손익, 나머지 10,000이 당기이익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⑤ O 해설 공정가치 하락 15,000(80,000−65,000) 중 신용위험분 5,000은 기타포괄손익, 나머지 10,000은 당기이익이다 — 회계불일치가 없을 때의 원칙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45 회계학 · 재무회계 · 무형자산 정답 ③

① X 해설 특허권은 법적 권리라 따로 식별해 인식하고, 손상 뒤 가치가 회복되면 환입할 수 있다 — 영업권과 달리 개별 자산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45 해설 계속 정답 ③

② X 해설 회원권은 따로 사고팔 수 있어 개별 식별이 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도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③ O 해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가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넘는 금액이 영업권이다 — 따로 떼어 팔 수 없고, 매년 손상검사하며 환입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④ X 해설 라이선스는 계약에서 생기는 권리라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며, 사업결합 차액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⑤ X 해설 가상화폐는 하나하나 식별해 사고파는 자산이다 — 이전대가와 순자산의 차액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성격이 다르다.

46 회계학 · 재무회계 · 리스 정답 ⑤

① X 해설 재평가손실 5,000만 적은 금액이다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10,000과 리스부채 이자비용 6,000도 당기 비용이다.

② X 해설 리스부채 이자비용 6,000(50,000×12%)만 적은 금액이다 — 사용권자산 쪽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손실이 빠졌다.

③ X 해설 감가상각비 10,000과 재평가손실 5,000만 더하고 리스부채 이자비용 6,000을 빠뜨린 금액이다.

④ X 해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만 더한 금액이다 — 재평가잉여금이 없을 때의 재평가 감소액 5,000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실이다.

⑤ O 해설 감가상각비 10,000(50,000÷5, 소유권 이전이라 내용연수 5년) + 재평가손실 5,000(장부 40,000 − 공정가치 35,000) + 이자비용 6,000(50,000×12%) = 21,000 감소 — 처음 재평가에서 생긴 손실은 당기손익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47 회계학 · 재무회계 · 자본의 분류와 자본거래 정답 ③

① X 해설 기타포괄이익 800을 빠뜨린 금액이다 — 기타포괄이익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들어가 자본을 늘린다.

② X 해설 무상증자 500과 주식배당 300은 자본 안에서 잉여금이 자본금 쪽으로 옮겨 갈 뿐이라 자본 총액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는다.

47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자본 총액을 바꾸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600)·당기순이익(+1,000)·기타포괄이익(+800)뿐이다: 10,000 − 600 + 1,000 + 800 = 11,200. 무상증자·주식배당·자기주식 소각은 자본 안에서 계정만 바뀐다.

④ X 해설 자기주식을 사면 치른 돈만큼 자본이 줄어든다 — 취득 600은 빼고, 순이익 1,000과 기타포괄이익 800은 더한다.

⑤ X 해설 자기주식 취득으로 자본이 600 준 것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 뒤의 소각은 자본 안에서 계정만 바꿔 줄어든 자본을 되돌리지 않는다.

48 회계학 · 재무회계 · 거래형태별 수익인식 정답 ①

① O 해설 포인트 2,000점(10,000÷5)의 개별 판매가격 = 2,000 × 0.7 × 75% = 1,050. 배분: 10,000 × 1,050 ÷ (9,450 + 1,050) = 1,000 — 포인트는 20x2년부터 쓰므로 20x1년 말 전액이 이연수익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② X 해설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1,050을 그대로 적은 금액이다 — 판매대가 10,000을 제품 9,450과 포인트 1,050의 비율로 나눠야 한다.

③ X 해설 1,450이 되려면 제품 몫이 8,550이어야 한다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나누면 제품 9,000, 포인트 1,000이다.

④ X 해설 포인트 배분액은 개별 판매가격 비율(1,050/10,500 = 10%)을 판매대가 10,000에 곱해 구한다 — 1,000이다.

⑤ X 해설 2,000은 부여한 포인트 점수(10,000÷5)와 같은 숫자다 — 금액은 점당 0.7과 사용 예상률 75%를 곱한 뒤 비율로 배분해 구한다.

49 회계학 · 재무회계 · 복합금융상품 정답 ②

① X 해설 발행 때 부채 80,000의 40%로 계산한 금액이다 — 20x1년 유효이자 8,000과 배당 2,000을 반영한 전환일 부채 86,000을 쓴다.

② O 해설 20x1년 말 부채 = 80,000 + 이자 8,000(10%) − 배당 2,000 = 86,000. 40% 전환으로 부채 34,400(86,000×40%)이 자본이 된다 — 전환권 몫 8,000은 이미 자본이라 계정만 바뀐다. 자본증가액 = 34,400.

49 해설 계속 **정답 ②**

③ X 해설 액면 100,000의 40%다 — 자본으로 바뀌는 것은 액면이 아니라 전환일의 부채 장부금액이다.

④ X 해설 부채 34,400에 전환권대가 8,000(20,000×40%)을 더한 금액이다 — 전환권대가는 처음부터 자본이라 전환해도 자본 총액이 늘지 않는다.

⑤ X 해설 전환된 몫은 40%다 — 발행가의 절반이 아니라 전환일 부채 86,000의 40%만 자본으로 옮겨 온다.

50 회계학 · 재무회계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기말재고 **정답 ①**

① O 해설 외부 창고에 맡겨 둔 원재료도 소유권이 (주)감평에 있어 기말재고에 넣는다 — 보관 장소는 상관없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② X 해설 고객이 사겠다고 의사를 밝힌 시용품은 그때 판매가 된 것이라 재고에서 뺀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③ X 해설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 상품은 배에 실은 순간 소유권이 사는 쪽으로 넘어가, 운송 중이어도 파는 쪽 재고가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④ X 해설 ㄴ은 실을 때 이미 팔렸고, ㄹ은 도착지 인도조건이라 닿기 전까지 파는 쪽 재고다 — 둘 다 (주)감평 재고가 아니다.

⑤ X 해설 ㄷ은 사용의사 표시로 판매가 끝났고, ㄹ은 도착 전이라 아직 판매자 소유다 — 외부 보관 원재료 ㄱ이 빠졌다.

51 회계학 · 재무회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5단계) **정답 ③**

① O 해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처럼 제삼자 몫으로 대신 받는 돈은 뺀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② O 해설 약속한 대가에는 정해진 금액뿐 아니라 할인·성과보너스·환불 같은 변동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③ X 해설 결과가 두 가지뿐이면(보너스를 받거나 못 받거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알맞다 — 기댓값은 결과가 여럿일 때 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④ O 해설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운데 고른 방법을 한 계약 전체에 똑같이 쓴다 — 계약 안에서 바꿔 쓰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51 해설 계속 **정답 ③**

⑤ O 해설 받은 대가를 돌려줄 것으로 예상하면 그 몫은 수익이 아니라 환불부채로 잡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52 회계학 · 재무회계 · 투자부동산 **정답 ④**

① O 해설 보유 중인 투자부동산의 첫 측정은 원가다 — 공정가치모형을 고르더라도 처음에는 원가로 잡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② O 해설 대금을 나중에 치르는 조건이면 원가는 지금 현금으로 샀을 가격이고, 총지급액과의 차이는 그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③ O 해설 공정가치모형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다시 재므로 따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④ X 해설 직접 지은 투자부동산이 완공되면 그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에 넣는다 — 공정가치모형의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⑤ O 해설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으로 바꾸면 그 차액은 재고자산을 판 것처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53 회계학 · 재무회계 · 재무제표 표시 **정답 ④**

① O 해설 K-IFRS를 따랐다고 밝히려면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 일부만 지켰으면 그렇게 적을 수 없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② O 해설 유동·비유동으로 나눠 표시하더라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언제나 비유동으로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③ O 해설 비용을 기능별로 나눠 보여 주는 기업은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 같은 성격별 정보를 덧붙여 공시해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④ X 해설 어떤 수익·비용도 특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다 —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은 물론 주석에서도 금지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⑤ O 해설 손실충당금을 빼서 매출채권을 순액으로 보여 주는 것은 자산을 깎아 평가한 것이라 상계표시가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54 회계학 · 재무회계 · 감가상각과 후속원가·제거 정답 ②

① X 해설 잔존가치가 20,000이면 20x4년 상각비는 (430,000−20,000)÷4 = 102,500이라 100,000과 맞지 않는다.

② O 해설 20x3년 말까지 상각 = (1,000,000 − 50,000) ÷ 5 × 3 = 570,000, 장부 430,000. 바뀐 내용연수 7년 중 3년이 지나 4년이 남았다: (430,000 − 잔존가치) ÷ 4 = 100,000 → 잔존가치 = 430,000 − 400,000 = 30,000(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③ X 해설 잔존가치를 바꾸기 전 50,000으로 두면 상각비가 (430,000−50,000)÷4 = 95,000이다 — 문제는 잔존가치도 바꿨다고 했다.

④ X 해설 잔존가치 70,000이면 상각비가 90,000((430,000−70,000)÷4)으로 나온다 — 상각비 100,000에서 거꾸로 풀어야 한다.

⑤ X 해설 남은 기간을 3년으로 보면 나오는 금액이다 (430,000 − 100,000×3) — 바뀐 내용연수 7년에서 이미 지난 3년을 빼면 4년이 남는다.

55 회계학 · 재무회계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기말재고 정답 ①

① O 해설 매입원가 = 매입 100,000(환급받는 부가세 10,000 제외) + 운임 10,000 + 하역료 5,000 + 관세 500 − 매입할인 5,000 − 리베이트 2,000 = 108,500. 보관료 3,000은 생산에 필요한 보관이 아니라 비용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② X 해설 자료 항목을 어떻게 더하고 빼도 110,300은 나오지 않는다 — 환급되는 부가세는 원가가 아니고, 할인·리베이트는 원가에서 뺀다.

③ X 해설 리베이트 2,000을 빼지 않은 금액이다 — 리베이트는 매입할인처럼 매입원가를 줄인다.

④ X 해설 매입할인 5,000을 빼지 않으면 나오는 금액이다 — 할인받은 만큼 실제로 치른 원가가 줄어든다.

⑤ X 해설 실수 하나로 나오는 금액이 아니다 —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와 보관료 3,000은 원가에 넣지 않고, 매입할인 5,000·리베이트 2,000은 매입원가에서 뺀다.

56 회계학 · 재무회계 · 유형자산의 인식과 취득원가 정답 ④

① X 해설 59,817은 액면 300,000과 현재가치 240,183의 차이, 곧 현재가치할인차금 총액이다 — 한 해 이자비용은 28,822뿐이다.

56 해설 계속 정답 ④

② X 해설 감가상각비만 적은 금액이다 — 무이자부 어음이라도 현재가치로 잰 부채에서 유효이자 28,822가 비용으로 생긴다.

③ X 해설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 두 가지다 — 현재가치 240,183을 기준으로 각각 80,061과 28,822를 구해 더한다.

④ O 해설 기계장치 원가 = 어음 현재가치 = 100,000 × 2.40183 = 240,183. 감가상각비 = 240,183 ÷ 3 = 80,061, 이자비용 = 240,183 × 12% = 28,822. 20x1년 비용 = 80,061 + 28,822 = 108,883(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⑤ X 해설 기계장치를 액면 300,000으로 잡아 상각비 100,000을 내고 이자 28,822를 더한 금액이다 — 원가는 현재가치 240,183이다.

57 회계학 · 재무회계 · 주당이익 정답 ②

① X 해설 자기주식은 9월 초부터 4개월만 빼고(1,500×4/12 = 500), 무상증자 요소 2%는 기초 주식에도 소급해 더한다.

② O 해설 공정가치로 본 발행분 = 2,000 × 40,000 ÷ 50,000 = 1,600주, 나머지 400주는 무상증자(400 ÷ 20,000 = 2%). 18,400 × 1.02 + 1,600 × 1.02 × 6/12 − 1,500 × 4/12 = 18,768 + 816 − 500 = 19,084주.

③ X 해설 기초 주식에 2%를 소급하고도 신주 2,000주를 모두 6개월 센 금액이다(18,768+1,000−500) — 무상 몫 400주가 두 번 들어갔다.

④ X 해설 무상증자 요소와 자기주식 취득을 모두 빠뜨린 금액이다(18,400 + 2,000×6/12) — 자기주식 500주(4개월분)를 빼야 한다.

⑤ X 해설 유상증자 2,000주를 기초부터 있던 것으로 보고 자기주식도 빼지 않은 금액이다(18,400+2,000) — 7월 발행분은 6개월만 센다.

58 회계학 · 재무회계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정답 ②

① X 해설 보증 충당부채에서 보험 변제 175,000을 빼 순액으로 잡은 금액이다(120,000+175,000) — 변제받을 금액은 충당부채와 따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58 해설 계속 정답 ②

② O 해설 충당부채 = 원상복구 120,000(현재가치) + 제품보증 350,000 = 470,000. 구조조정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 의무가 없고, 소송은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미래 영업손실은 인식하지 않는다. 보험 변제 50%는 별도 자산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③ X 해설 원상복구원가를 할인하지 않은 200,000으로 잡은 금액이다 —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면 현재가치 120,000으로 측정한다.

④ X 해설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소송 200,000까지 넣은 금액이다 — 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주석에만 적는다.

⑤ X 해설 미래 예상 영업손실 450,000까지 넣은 금액이다 — 앞으로 생길 영업손실은 현재의무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잡지 않는다.

59 회계학 · 재무회계 · 법인세회계 정답 ③

① X 해설 유효세율 = 법인세비용 107,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이다 — 영구적 차이가 세금을 늘려 법정세율 20%보다 높게 나온다.

② X 해설 법정세율 20%를 그대로 쓴 값이다 — 벌과금·접대비 같은 영구적 차이 35,000에 붙는 세금 7,000 때문에 유효세율이 올라간다.

③ O 해설 당기법인세 = (500,000 + 20,000 + 15,000 + 15,000) × 20% = 11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5,000은 일시적 차이라 이연법인세자산 3,000이 생겨 법인세비용 = 110,000 − 3,000 = 107,000. 유효세율 = 107,000 ÷ 500,000 = 21.4%.

④ X 해설 당기법인세 110,000을 그대로 법인세비용으로 본 값이다 — 이연법인세자산 3,000만큼 비용이 줄어 107,000이다.

⑤ X 해설 일시적 차이는 유효세율을 바꾸지 않는다 — 영구적 차이 35,000만 반영하면 (500,000+35,000)×20% ÷500,000 = 21.4%다.

60 회계학 · 재무회계 · 무형자산 정답 ④

① X 해설 50,000이 되려면 장부금액이 130,000이어야 한다 — 원가 150,000에서 한 해 상각 15,000만 빼면 135,000이다.

60 해설 계속 정답 ④

② X 해설 개발비는 쓸 수 있게 된 20x3년 1월부터 상각한다 — 20x1·20x2년에는 상각하지 않으니 20x3년 말 장부는 135,000이다.

③ X 해설 53,750은 정답보다 1,250 작다 — 원가 150,000(요건 충족 뒤 50,000 + 20x2년 100,000)에서 20x3년 상각 15,000을 뺀 135,000과 회수가능액 80,000의 차이가 손상이다.

④ O 해설 개발비 원가 = 요건 충족 뒤 지출 50,000(20x1년 10~12월) + 20x2년 100,000 = 150,000. 20x3년 상각 15,000(150,000÷10) 뒤 장부 135,000, 손상차손 = 135,000 − 80,000 = 55,000 — 연구단계와 요건 미충족 지출은 비용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⑤ X 해설 20x3년 상각 15,000을 하지 않고 원가 150,000에서 바로 회수가능액을 뺀 금액이다 — 손상검사 전에 그 해 상각부터 한다.

61 회계학 · 재무회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5단계) 정답 ④

① O 해설 계약 승인은 서면이 아니어도 된다 — 말로 하거나 사업 관행으로 승인하고 각자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면 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② O 해설 넘겨줄 재화·용역에 대해 당사자 각자의 권리를 알아볼 수 있어야 계약으로 본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③ O 해설 언제 얼마를 치를지, 곧 지급조건을 알아볼 수 있어야 고객과의 계약이 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④ X 해설 계약에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 — 거래 결과로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⑤ O 해설 받을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야 계약으로 본다 — 고객이 치를 능력과 의도를 함께 본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62 회계학 · 재무회계 · 투자부동산 정답 ①

① X 해설 운용리스로 빌려주는 건물은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보유하므로 투자부동산이다 — 영업 중 팔려고 보유하는 부동산만 재고자산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62 해설 계속 정답 ①

② O 해설 회사가 직접 쓰려고 가진 부동산은 유형자산이다 — 투자부동산과는 쓰임새로 구분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③ O 해설 쓰던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각예정 요건을 갖추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따로 표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④ O 해설 영업 중 팔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짓고 있는 부동산은 상품과 같아 재고자산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⑤ O 해설 앞으로 어디에 쓸지 정하지 않은 토지는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63 회계학 · 재무회계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기말재고 정답 ①

① O 해설 적송품 원가 = 10대 × 700 + 적송운임 100 = 7,100. 팔린 7대 몫 매출원가 = 7,100 × 7/10 = 4,970 — 적송운임은 적송품 원가에 넣어 팔린 비율만큼 비용이 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② X 해설 매출원가는 팔린 7대 원가 4,900(7×700)에 운임 중 7대 몫 70(100×7/10)을 더한다 — 판매수수료나 팔리지 않은 몫은 넣지 않는다.

③ X 해설 팔린 7대를 원가가 아니라 판매가격 1,000으로 계산하고 운임 몫 70을 더한 금액이다 — 매출원가는 원가 700으로 잰다.

④ X 해설 아직 팔리지 않은 3대의 원가 2,100과 운임 30은 적송품(재고)으로 남는다 — 매출원가는 팔린 7대 몫뿐이다.

⑤ X 해설 적송한 10대 전부를 판매가격으로 계산하고 운임 100을 다 더한 금액이다(10×1,000+100) — 팔린 7대의 원가만 매출원가다.

64 회계학 · 재무회계 · 주식기준보상 정답 ④

① X 해설 기말 부채 18,000에서 앞 해 부채 12,500만 빼고 행사 때 내준 현금 2,000을 빠뜨린 금액이다.

② X 해설 현금결제형은 가득 뒤에도 매기 말 공정가치로 부채를 다시 재고, 그 변동과 행사 때 준 현금을 함께 비용에 반영한다.

③ X 해설 행사한 권리는 내재가치 10으로 현금을 주고, 남은 권리는 공정가치 15로 부채를 잰다 — 두 단가가 다르다.

64 해설 계속 정답 ④

④ O 해설 남은 권리 1,200개(60명×20) × 공정가치 15 = 부채 18,000. 행사분 지급 = 200개(10명×20) × 내재가치 10 = 2,000. 20x3년 비용 = 18,000 + 2,000 − 20x2년 말 부채 12,500(6,000+6,500) = 7,500(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⑤ X 해설 행사한 200개까지 공정가치 15로 계산한 금액이다(1,400×15 − 12,500) — 실제로 준 현금은 내재가치 10 기준 2,000이다.

65 회계학 · 재무회계 · 금융자산의 분류·인식·제거와 지분상품 정답 ①

① O 해설 취득원가 = 20주 × 180 + 거래원가 150 = 3,75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은 거래원가를 원가에 더한다. 기타포괄이익 = 20주 × 240 − 3,750 = 4,800 − 3,750 = 1,050(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② X 해설 거래원가 150을 원가에 넣지 않은 금액이다(20×(240−180)) — 당기손익-공정가치 자산과 달리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더한다.

③ X 해설 거래원가 150을 원가에서 빼 버린 금액이다(4,800−3,450) — 거래원가는 원가에 더해져 평가이익을 줄인다.

④ X 해설 평가이익은 공정가치 4,800에서 거래원가를 포함한 원가 3,750을 뺀다 — 액면 150은 평가와 관계없다.

⑤ X 해설 원가는 실제로 치른 주당 180과 거래원가로 정하고, 기말 공정가치 240과 견준다 — 액면금액은 측정에 쓰지 않는다.

66 회계학 · 재무회계 · 현금흐름표 정답 ⑤

① X 해설 순현금흐름은 발생주의 이익 900에서 출발해 운전자본 증감만 고친다 — 증감 합계가 −300이라 결과는 양수 600이다.

② X 해설 미수수익 증가 300과 미지급비용 감소 300만 현금을 줄인다 — 재고·매출채권 감소 300은 오히려 현금을 늘린다.

③ X 해설 재고자산 감소 200과 매출채권 감소 100은 모두 현금을 늘린다 — 둘을 빠뜨리면 900−600 = 300만 남는다.

④ X 해설 재고 감소 200을 빠뜨리거나 매출채권 감소 100을 거꾸로 빼면 400이 나온다 — 두 자산이 줄면 현금은 늘어난다.

66 해설 계속 정답 ⑤

⑤ O 해설 발생주의 이익 900(1,500−600) + 재고자산 감소 200 − 미수수익 증가 300 + 매출채권 감소 100 − 미지급비용 감소 300 = 600 — 자산이 줄면 현금이 늘고, 부채가 줄면 현금이 준다.

67 회계학 · 재무회계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정답 ⑤

① X 해설 기초 차이를 빠뜨리고 기말재고 증가 600을 이익에서 뺀 금액이다 — 기말재고가 늘면 매출원가가 줄어 이익이 는다.

② X 해설 평균법 이익을 그대로 둔 금액이다 —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 적용하므로 20x2년 이익도 선입선출법으로 다시 계산한다.

③ X 해설 기초재고가 줄면(2,800→2,500) 매출원가가 줄어 이익이 300 늘고, 기말재고 증가 600도 이익을 늘린다 — 두 효과를 모두 더한다.

④ X 해설 기말재고 증가 600만 반영하고 기초재고 감소 300을 빠뜨린 금액이다 — 소급 적용이라 20x2년 기초재고도 선입선출법 금액으로 바꾼다.

⑤ O 해설 선입선출법으로 소급하면 20x2년 기초재고가 300 줄어(2,800→2,500) 매출원가가 300 줄고, 기말재고가 600 늘어(2,200→2,800) 매출원가가 600 준다: 2,000 + 300 + 600 = 2,900(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68 회계학 · 재무회계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정답 ①

① O 해설 20x2년 장부가 마감됐으므로 오류의 누적효과는 20x3년 기초 이익잉여금에서 고치고, 20x3년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② X 해설 처분이익 100(1,600−1,500)은 20x1년에 속한 이익이다 — 마감된 해의 손익은 20x3년 당기손익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고친다.

③ X 해설 한 해 감가상각비 250(2,500×10%)도 이미 마감된 20x1·20x2년 비용이다 — 되돌리는 것은 기초 이익잉여금 수정이다.

④ X 해설 두 해 감가상각비 500을 되돌리는 것도 20x3년 이익이 아니라 기초 이익잉여금을 고치는 일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68 해설 계속 정답 ①

⑤ X 해설 누적효과(잡수익 1,600 − 감가상각 500 − 맞는 처분이익 100 = 이익 1,000 과대)는 20x3년 기초 이익잉여금에서 줄인다 — 당기순이익은 그대로다.

69 회계학 · 재무회계 · 유형자산의 손상 정답 ②

① X 해설 1,200은 순공정가치 자체다 — 손상차손은 장부금액 3,500에서 회수가능액을 뺀 차이로 구한다.

② O 해설 회수가능액 = 순공정가치 1,200과 사용가치 1,800 중 큰 1,800. 손상차손 = 장부금액 3,500 − 1,800 = 1,700 — 계속 쓰는 쪽이 팔 때보다 더 벌 수 있으면 사용가치가 기준이 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③ X 해설 1,800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다 — 손상차손은 장부금액 3,500이 이를 넘는 1,700이다.

④ X 해설 두 금액의 평균 1,500을 회수가능액으로 본 금액이다(3,500−1,500) — 평균이 아니라 큰 쪽을 회수가능액으로 쓴다.

⑤ X 해설 순공정가치 1,200으로 장부를 낮춘 금액이다(3,500−1,200) — 계속 써서 1,800을 회수할 수 있으니 그만큼만 깎는다.

70 회계학 · 재무회계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정답 ⑤

① X 해설 20x1년 판매분도 보증기간이 2년이라 20x2년 말에 500(900−400)이 남아 있다 — 두 해 판매분 잔액을 모두 더한다.

② X 해설 1,000은 두 해 동안 실제로 보증해 준 금액(50대 ×20)이다 — 충당부채는 설정액 3,300에서 이것을 뺀 잔액이다.

③ X 해설 충당부채는 판매수량×3%×20으로 설정한 뒤 실제 보증한 대수×20만큼 줄인다 — 20x1년분 잔액 500, 20x2년분 잔액 1,800이다.

④ X 해설 20x2년 판매분 잔액(2,400−600)만 남긴 금액이다 — 20x1년분 잔액 500도 아직 보증기간 안이라 남는다.

⑤ O 해설 설정액: 20x1년분 1,500대×3%×20 = 900, 20x2년분 4,000대×3%×20 = 2,400, 합계 3,300. 사용액: (5+15+30)대 × 20 = 1,000. 20x2년 말 충당부채 = 3,300 − 1,000 = 2,300 — 2년 보증이라 20x1년분도 아직 남는다.

71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전략적 원가관리와 최신 관리회계 기법 정답 ④

① X 해설 재료처리량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직접재료원가만 뺀다 — 제약이론은 노무원가까지 고정원가처럼 본다.

② X 해설 수명주기원가계산은 원가 대부분이 연구·설계 같은 제조 이전 단계에서 정해진다고 보고, 그 단계의 원가 절감을 강조한다.

③ X 해설 목표원가계산은 제품을 기획·설계하는 단계에서 원가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 제조단계 원가통제는 표준원가의 몫이다.

④ O 해설 균형성과표는 전략을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 네 관점의 성과지표로 바꿔 조직 전체에 알리는 도구다.

⑤ X 해설 통제원가는 예방원가와 평가원가이고, 내부·외부 실패원가는 품질이 나빠 생기는 실패원가다 — 통제원가를 늘려 실패원가를 줄인다.

72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종합원가계산과 공손 정답 ②

① X 해설 재료원가까지 완성도 70%로 환산한 금액이다 (1,000×50×70%) —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다 들어가 공손품에도 100% 들어 있다.

② O 해설 공손 = 3,000 + 14,000 − 13,000 − 2,500 = 1,500개. 기초재공품(80%)은 이미 검사를 지나 당기 합격품은 10,000개, 정상공손 1,000개. 원가 = 1,000 × (30 + 20×70%) = 44,000 — 기말(60%)은 검사 전이라 모두 완성품에 붙는다.

③ X 해설 정상공손 1,000개에는 재료원가 30과 70%까지의 전환원가 14(20×70%)만 붙는다 — 개당 44다.

④ X 해설 기초재공품 3,000개까지 당기 합격품으로 보아 정상공손을 1,300개로 계산한 금액이다 — 기초분은 앞 기간에 검사를 지났다.

⑤ X 해설 공손품 1,500개를 모두 정상공손으로 본 금액이다 (1,500×44) — 합격품의 10%를 넘는 500개는 비정상공손으로 따로 손실 처리한다.

73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관련원가와 단기의사결정 정답 ⑤

① X 해설 B 폐쇄의 효과는 B 공헌이익 상실과 광고비 절감(순 40,000)에 C 공헌이익 감소 56,000을 더해 따진다.

② X 해설 회피할 수 없는 급여 50,000까지 아낀다고 본 금액이다 — 회피불능원가는 B를 닫아도 계속 나간다.

73 해설 계속 정답 ⑤

③ X 해설 매출액 비례로 나눈 공통원가 30,000까지 없어진다고 본 금액이다 — 배부만 했을 뿐 총액 100,000은 그대로 나간다.

④ X 해설 매출액 비례로 나눈 기타 배부액 중 C 몫도 매출과 함께 20%(10,000) 줄어 아낀다고 본 금액이다 — 배부만 바뀔 뿐 공통원가 총액 100,000은 그대로다.

⑤ O 해설 B를 닫으면 B 공헌이익 100,000을 잃고 B 광고비 60,000을 아끼며, C 매출 20% 감소로 C 공헌이익 56,000(280,000×20%)을 잃는다. 급여·공통원가는 그대로라 이익 감소 = 100,000 − 60,000 + 56,000 = 96,000.

74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표준원가계산과 원가차이분석 정답 ②

① X 해설 4,600개면 표준시간 9,200시간이라 능률차이가 (10,400−9,200)×2.5 = 3,000 불리가 된다 — 문제의 2,000과 다르다.

② O 해설 표준배부액 = 실제 23,000 + 유리 1,000 = 24,000. 실제시간 기준 예산 = 24,000 + 능률차이 2,000 = 26,000이라 표준배부율 = 26,000 ÷ 10,400 = 2.5. 표준시간 = 24,000 ÷ 2.5 = 9,600시간, 생산량 = 9,600 ÷ 2 = 4,800개.

③ X 해설 5,000개라면 표준시간 10,000시간으로 능률차이가 1,000 불리(400시간×2.5)에 그친다 — 불리 2,000이려면 표준시간이 9,600시간이어야 한다.

④ X 해설 실제 직접노무시간 10,400을 그대로 2로 나눈 값이다 — 생산량은 실제시간이 아니라 표준시간에서 거꾸로 구한다.

⑤ X 해설 5,400개면 표준시간 10,800시간이 실제 10,400시간보다 길어 능률차이가 유리로 나온다 — 문제는 불리 2,000이다.

75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원가의 개념과 제조원가의 흐름 정답 ⑤

① O 해설 단위당 변동원가 20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같아 2,000개의 변동원가 A = 2,000 × 20 = 40,000이다.

② O 해설 고정원가 총액은 관련범위 안에서 그대로다 — 5,000개 × 단위당 10 = 50,000이 2,000개에서도 B다.

③ O 해설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0개의 단위원가 30에서 단위당 고정원가 10을 뺀 20이고, 2,000개에서도 C = 20이다.

75 해설 계속 **정답 ⑤**

④ O 해설 2,000개의 단위당 원가 D = 변동 20 + 고정 25(50,000÷2,000) = 45 — 생산량이 줄면 단위당 고정원가가 커진다.

⑤ X 해설 고정원가 총액 = 5,000개 × 10 = 50,000, 단위당 변동원가 = 30 − 10 = 20. E = 5,000 × 30 = 150,000 — 90,000은 2,000개일 때의 총원가(40,000 + 50,000)를 옮겨 적은 금액이다.

76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개별원가계산과 정상원가계산 **정답 ③**

① X 해설 실제 제조간접원가로 배부율을 12(960,000÷80,000)로 잡아 나눈 값이다 — 예정배부율은 예산 928,000으로 정한다.

② X 해설 예정배부액은 예산액을 예산 조업도로 나눈 배부율에 실제 조업도를 곱한 것이다 — 실제 원가 960,000은 배부차이를 구할 때만 쓴다.

③ O 해설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원가 예산 928,000 ÷ 예산 기계시간 80,000 = 11.6. 배부액 = 실제시간 × 11.6이므로 실제 기계작업시간 = 840,710 ÷ 11.6 = 72,475시간.

④ X 해설 배부액 840,710은 실제시간 × 예정배부율 11.6이다 — 실제 원가와의 차이 119,290은 과소배부액일 뿐 시간 계산에 쓰지 않는다.

⑤ X 해설 실제 기계작업시간은 배부액을 예정배부율로 나눠 거꾸로 구한다 — 예산 기계시간 80,000은 배부율을 정할 때만 쓴다.

77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 **정답 ④**

① X 해설 580개면 기초재고의 고정원가가 87,000으로 기말 75,000보다 12,000만 많다 — 이익 차이 30,000이 되려면 200개가 더 있어야 한다.

② X 해설 기초·기말 재고의 수량 차이는 30,000 ÷ 단위당 고정원가 150 = 200개다 — 기말 500개에 200개를 더한다.

③ X 해설 변동원가 이익이 더 크면 재고가 줄었다는 뜻이다 — 기초재고가 기말 500개보다 200개 많아야 한다.

④ O 해설 변동원가 이익이 30,000 크다 = 기초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기말보다 30,000 많다. 단위당 고정원가 = 750,000 ÷ 5,000 = 150(두 해 같음), 기말 500개 × 150 = 75,000 → 기초 = 105,000 ÷ 150 = 700개.

77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X 해설 740개면 기초 고정원가가 111,000이라 이익 차이가 36,000이 된다 — 문제의 30,000과 다르다.

78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 **정답 ③**

① X 해설 고정원가는 판매량이 늘어도 300,000 그대로다 — 늘어나는 것은 공헌이익 100,000(500,000×20%)뿐이다.

② X 해설 판매량 20% 증가는 공헌이익을 100,000 늘리고, 그 전액이 영업이익 증가가 된다 — 200,000 + 100,000이다.

③ O 해설 판매량이 20% 늘면 변동원가도 20% 늘어 공헌이익 = 500,000 × 1.2 = 600,000, 고정원가 300,000은 그대로다. 영업이익 = 600,000 − 300,000 = 300,000 — 영업레버리지도 2.5 × 20% = 50% 증가로도 같다.

④ X 해설 변동원가 증가분 140,000(700,000×20%)은 이익이 아니라 비용 증가다 — 매출 증가 240,000에서 이를 빼면 공헌이익이 100,000 는다.

⑤ X 해설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 500,000 ÷ 영업이익 200,000 = 2.5다 — 판매량 20% 증가에 영업이익은 50% 늘어 300,000이다.

79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 **정답 ⑤**

① X 해설 29.25%는 B의 몫(75% × B)이다 — 매출배합 75%로 나눠야 B의 공헌이익률 39%가 나온다.

② X 해설 B가 34.4%라면 가중평균이 25%×23% + 75%×34.4% = 31.55%로 35%에 못 미친다.

③ X 해설 35%는 두 제품을 섞은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이다 — A가 23%로 낮으니 B는 35%보다 높아야 한다.

④ X 해설 B가 37.4%면 가중평균은 33.8%다 — 35%를 맞추려면 B가 39%여야 한다.

⑤ O 해설 공헌이익 = 영업이익 3,000,000 + 고정원가 2,250,000 = 5,250,000, 가중평균 공헌이익률 = 5,250,000 ÷ 15,000,000 = 35%. 25% × 23% + 75% × B = 35% → 75% × B = 29.25% → B = 39%.

80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정답 ②

① X 해설 최저필수수익률이 8%면 RI가 50,000(250,000−200,000)이다 — 25,000이 되려면 자본비용이 225,000이어야 한다.

② O 해설 영업이익 = 평균영업용자산 2,500,000 × ROI 10% = 250,000. RI = 250,000 − 2,500,000 × 최저필수수익률 = 25,000 → 2,500,000 × r = 225,000 → r = 9%.

③ X 해설 10%는 ROI다 — 최저필수수익률이 ROI와 같으면 잔여이익은 0이 된다.

④ X 해설 RI를 −25,000으로 보면 나오는 값이다 (250,000−275,000) — ROI가 최저필수수익률보다 높아야 RI가 양수다.

⑤ X 해설 12%면 자본비용이 300,000이라 RI가 −50,000이다 — RI가 양수이므로 최저필수수익률은 ROI 10%보다 낮다.